

석유산업 자율화는 가격자율화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곽 상 경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 자료는 지난 6월3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에너지·자원부문 6차5개년계획 수정을 위한 종합공청회에서 곽상경교수(고려대)와 김태유교수(서울대)가 에너지산업 자율화에 대해 코멘트한 내용을 정리하여 옮긴 것이다.
(편집자註)

저는 학교 외에는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에서 휴직 한번 한 적도 없고, 학생들에게 어용교수로 몰려 쫓겨나서 강의 못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위기가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으나, 항상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완전히 마크스·레닌主義로서 계급투쟁을 통한 현재 체제의 전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간단히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부 학생이 아닌 엄청난 수의 학생이며, 내용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은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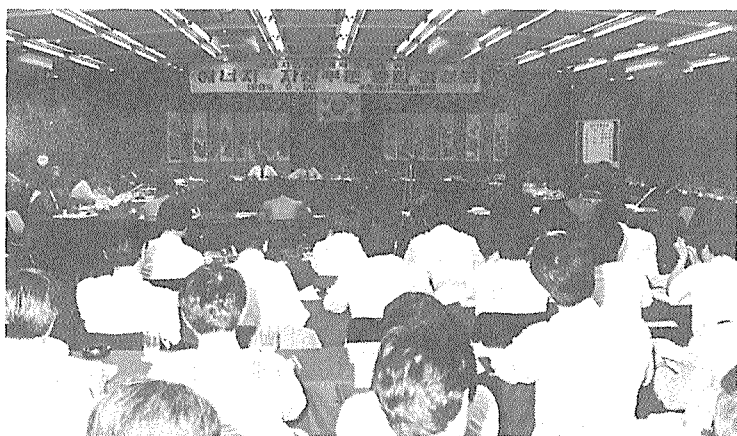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가격메커니즘에 의한 경제운용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변질이 있고,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나라 경제와 우리나라 국민은 그대로 끝이다 하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학생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학원 안에서든 밖에서든 학자들이 가격자율화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신조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국가경제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여러분이 석탄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경제학회나 언론기관에서 석탄문제에 대한 많은 비판을 들어왔습니다. 아마 1년 전인듯 싶은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석탄에 대한 정책협의회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석유가격이 벌써 하락한 때였습니다. 석유가격 하락이 시작되었고, 실제로 내려갔으며, 또 그 당시는 국내경제도 호황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66

경제운용에 있어서 페어 플레이 기능은 가격메커니즘이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정도까지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페어 플레이 원칙을 무시하고서는 경제질서의 유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에너지정책은 공급측면보다는 소비측면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합니다.

99

당시 여러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석탄수요 감퇴는 경제적으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았기에 그때 저는 국내 석탄소비가 연간 2천3백만톤이 아니라 1천4백만톤인지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석탄업계에 계신 분들로부터 심한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그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현상황의 석탄수요 감소에 대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이에 대한 대답은 누구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쓰지 않는 석탄에 대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

읍니까.

가격자율화에 대해 한가지 부연해 보면, 제5공화국에서 제6공화국으로 넘어오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 생각에 「페어 플레이」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페어 플레이를 하기로 한 이상 그 게임의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과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동등한 Rule을 적용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해야만 경제질서가 유지되고 효율성의 유지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경제운용에 있어서 페어 플레이는 가격메커니즘이 담당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겠지만, 그 페어 플레이의 원칙을 무시하고서는 경제질서의 유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석탄정책에 대해서는 생산자는 물론 공급자도 수요자도, 연구하는 사람도 정책을 담당하는 동자부 조차도 불만입니다.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석탄재고가 자꾸 쌓이고 있고, 아까 경동탄광의李建길사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보일러 판매량이 감소하는데서 보듯이, 석탄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이 지나고 내년이 지나 어느 시기에 가면 분명히 석탄재고가 큰 문제가 되고 석탄산업이 어렵게 될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일단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신 국회의원 두분에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기 동자부 장관님도 계시지만, 국회에 나가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별의별 질문을 다 하고, 별의별 서류를 다 내놓으라고 할텐데, 정작 이런데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듣는 사람이 별로 없고, 국민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이 점이 바로 큰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석탄산업이 안고 있는 재고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질문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뭐는 어떻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제가 대학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해결방법은 「페어 플레이」에 의한 방법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다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민간자율에 맡겨 두고, 국민부담을 최소화시키 나가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거둔 여러 세금을 한쪽으로만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국민에 대한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은 곤란한 얘기가 됩니다.

또 하나 현재 우리나라 체제 상으로는 자유기업제, 자유민주주의이며, 경제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입니다. 여기에서 소비자도 경제의 「페어 플레이」에 참가해야 합니다. 즉 선택의 자유로움이 있으면 설사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승복하고, 정부와 기업도 어느 정도는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격의 「페어 플레이」 없이 소비자더러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연탄, 전기, 석유등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가격을 정해 놓고서 소비자더러 선택하라고 하는 것

은 자유선택이 아닙니다.

현재 국내에너지시장에서 에너지源別로 여러가지 가격수준과 소득수준은 어떠한가, 열등재 우등재는 어떠한가, 여기에서 소비자의 선택은 어떠한가 정부가 발표한 뒤 소비자의 선택을 예를 들어 석탄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유도하는 것은 정부가 할 역할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6차5개년계획은 경제발전 단계나 기타 여러가지 면에서 기본적으로 과거의 5차계획과 그 성질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만 최종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의 과제에 있어서 정부가 좀 더 국민을 위해 제대로 기능을 하고, 모든 국민과 경제가 제대로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해야 하고, 또 기업도 정부에 대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혜택을 달라」하는 식의 정부의존적인 자세는 탈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기업이 끼어 든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여 정부로 하여금 다른 기업이 끼어드는 것을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식입니다.

정유산업에 있어서 유가와 투자의 자율화, 그리고 선탄산업에 있어서 여러가지 합리화를 시행하게 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차질이 생기니 자율화를 못하게 해달라, 다시 말씀드리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이 끼어들게 됨으로써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것을 못하게 막아달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할 사람이나,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적게 하는 사람이나 공정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는다면, 또 자기 돈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또 자기가 생산한 것이 경제성이나 생산성 등 여러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경쟁에 있어 유리하다면, 그 유리한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각자의 편의대로만 주장하게 되면, 원칙은 없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제의 효율성과 발전은 어렵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너지산업의 자율화는 순리적인 메커니즘, 즉 가격에 의해서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석유산업의 자율화는 가격자율화를 통해서 추진하고 공공에너지기업도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적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공급측면 보다는 소비측면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